

금융위 '자본시장 혁신과제' 들여다봤더니

혁신기업에 '돈맥' 뚫어준다... 자금공급체계 개편

민간자금 中企·벤처기업에 유독
전문투자자 15만명 증가 예상
가격 산정 공적플랫폼 최소화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대출잔액은 814조 4000억원에 달한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 회사채 발행잔액은 235조4000억원에 불과하다. 자금조달을 투자보다는 은행 대출에 매달려야 하는 우리 기업들의 현실이다.

1일 당정이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협의해 내놓은 것은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다. 자금공급체계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쳐 풍부한 민간 자금이 중·벤처기업으로 흘러들어 갈 수 있도록 '돈맥' 뚫어주겠다는 의도다.

◆BDC로 일반투자자도 비상장기업에 투자
BDC는 투자대상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모 또는 상장한 후 비상장기업과 코넥스기업에 투자하는 투자목적회사다.

혁신기업 자금조달 체계 전면 개선

- ①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체계 강화
 - '18.12월 개선방안 발표
 - '19.1사분기 자본법 국회 제출
- ② 자산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 기회 확대
 - '19.2월 개선방안 발표
 - '19.上 자산유동화법 국회 제출
- ③ BDC제도 도입
 - '19.1사분기 개선방안 발표

일반투자자 입장에서 상장된 BDC를 통해 비상장기업에 쉽게 투자할 수 있고, 자금 회수도 쉬워진다. 기업 역시 청산 시점이 정해진 벤처펀드 등보다 안정적으로 자금을 공급해 줄 수 있는 BDC를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기존 상장된 스팩(기업인수목적회사·

SPAC)보다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 정책관은 "스팩은 1개 기업에 투자하는 반면 BDC는 블라인드 펀드 형식으로 여러 개 비상장기업에 분산 투자한다"며 "BDC의 설립요건은 자산운용사나 증권사의 역할까지 고려해서 좀 더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혁신기업에 적극 투자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도 대폭 늘린다.

기존에는 전문투자자 요건이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억원 이상이면 연소득이 1억원 이상이거나, 총자산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로 엄격했다. 당정은 이를 금융투자상품 잔고 요건을 '충분한 투자경험' 등으로 완화하고, 소득·재산요건 외에 '증권 관련 지식을 보유한 자'를 포함 시키기로 했다. 금융투자업 종사자나 변호사, 회계사, 엔젤투자자, 금융투자 관련 자격증 보유자 등도 모두 전문투자자

가 될 수 있다.

박 정책관은 "국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9만4000명이고 자격증 관련 금융투자업 종사자는 4만6000명 정도"라며 "이번 대책으로 전문투자자 수가 14만~15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IPO 주관사 자율성 확대

기업공개(IPO) 시장은 주관사의 자율성을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그간 국내 IPO 시장은 수요예측과 주식배정 시 주관사에 별도 재량이 없는 탓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유인이 부족했다. 증권사 간 서비스 역시 차별화되기 어려웠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주관사가 수요예측 참여자를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허용하고, 상장예비심사청구 서식에 가격산정 관련 사항을 삭제하는 등 최초 가격산정에 대한 공적플랫폼의 심사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확대된 자율성 만큼 책임도 강화한다. 부실실사에 따른 과징금 한도를 현행 20억원에서 대폭 올리고, 책임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코넥스시장은 코스닥으로 성장사다리가 이어지도록 전문 프리코스닥 시장으로 키운다. 코스닥으로 이전상장이 쉽도록 질적심사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예외적 질적심사 적용 요건도 없앤다.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가격발견기능을 높이기 위해 코스닥으로 이전상장할 때는 발행가격 산정을 주관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코넥스시장의 유동성을 늘리기 위해서는 전문투자자가 편리하게 대규모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개인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위험감수능력 등에 따라 현재 1억원인 기본예탁금의 차등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국내 완성차업계, 신차·SUV로 국내외 판매 회복세

전세계 판매, 전년비 0.9% 올라
시장별 판매전략·주력상품 적용

국내 완성차 업계가 비수기인 여름 휴가철과 추석연휴 이후 침체된 내수 시장에서 판매 반등에 성공했다. 해외 판매량도 동반 상승하며 수출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1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지난 10월 국내 6만6288대, 해외 34만1872대 등 전세계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0.9% 증가한 총 40만8160대를 판매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국내 판매는 25.0% 증가, 해외 판매는 2.7%가 줄어든 수치다.

현대차는 국가별 위험 요소와 시장 특징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시장별로 효과적인 판매 전략을 적용해 올해 판매 목표 달성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연내 출시 예정인 제네시스 브랜드의 플래그십 모델과 초대형 SUV 신차를 성공적으로 론칭시켜 판매 모멘텀을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기아자동차는 국내 4만6100대, 해외 20만4194대 등 세계 시장에서 총 25만 294대를 판매했다. 신차 및 해외전략차종 판매 호조와 전년 대비 근무일수 증가 등의 영향 국내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22.9%, 해외 판매는 0.8% 증가하며 총 4.2% 성장했다. 차종별 글로벌 판매는 스포티지가 4만3511대로 가장 많이 팔렸으며 K3(포르테)가 3만5423대, 프라이드(리오)가 3만1844대로 뒤를 이었다.

쌍용차는 내수 1만82대, 수출 3342대(CKD 포함)를 포함 총 1만3424대를 판매했다. 이는 주력모델의 판매증가로 내수, 수출이 동시에 월 최대 실적을 달성함에 따라 전체 월 판매 역시 전년 동기 대비 24.9% 증가하며 올해 월 최대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

쌍용차는 전년 대비 139.1% 증가한

렉스턴 스포츠의 판매 성장에 힘입어 내수 시장에서 월 최대 실적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36.0%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렉스턴 스포츠는 지난달 월 최대 실적인 4099대를 판매했다. 수출 역시 렉스턴 스포츠 등 신규 라인업을 본격 투입한 데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0.4% 증가하면서 월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한국지엠은 지난달 내수시장에서 전년 동기대비 7.8% 증가한 총 8273대를 판매했다. 스팩크, 말리부, 트랙스 등 쉐보레 주력 상품이 내수 실적을 견인했다. 트랙스는 젊은 소형 SUV 고객을

공략하며 전년 대비 62.5% 증가한 1558대가 판매되며 올해 월 최대 판매실적을 기록했다. 스팩크는 내수시장에 3731대 판매되며 전년 대비 15.6% 증가세를 기록했다. 말리부는 총 1939대가 판매돼 전년 대비 10.0% 증가했다. 수출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19.9% 증가한 3만2204대를 기록했다.

르노삼성은 내수에서 전월 대비 31.3% 증가한 8814대, 수출에서 전월 대비 24.7% 늘어난 9816대로, 총 1만 8630대를 판매했다. 지난 9월보다 27.8% 증가한 실적을 거두었다. 다만 전년 동기 대비 5.4% 감소했다.

르노삼성의 판매 상승은 QM6가 견인했다. QM6의 판매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51.6% 증가한 3455대로 올해 처음 월 판매 3000대를 넘어섰다. 소형 SUV 모델인 QM3와 초소형 전기차 모델인 트위지의 판매도 증가했다. QM3는 전월 대비 34.7% 늘어난 590대, 트위지는 전월 대비 39.7% 증가한 109대가 판매했다. 르노 브랜드 중 클리오의 지난 달 681대가 출고되며 전월 대비 124% 성장했다. 르노삼성 수출은 북미 수출용 닛산 로고 8700대, QM6 1116대가 판매했다. 특히 로고는 북미 시장 판매 호조로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했다.

/양성운 기자 ysw@



금융위 연대보증 폐지 반년 "보증공급 위축 없어"

정부가 올해 상반기 금융권 연대보증을 폐지한 데 이어 올해 하반기부터 기존 대출도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일 구로디지털 산업단지에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연대보증 폐지 진행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지난 4월 신용보증과 기술보증 등 금융공공기관에서 받는 보증이나 대출 시 중소기업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은행들도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에 대해 연대보증을 폐지한 바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연대보증 폐지 이후 지난 6개월간 우려와 달리 신·기보의 보증이 크게 위축되는 일은 없었다.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전체 보증공급액(신규·증액+만기연장)은 37조8천4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소폭인 2천879억원 줄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창업기업 보증 공급은 13조9천669억원에서 15조6천485억원으로 1조6천816억원 증가했다.

연대보증 폐지 이후 신·기보의 법인기업에 대한 보증거절 금액은 4천409억원에서 4천110억원으로 299억원 줄었고, 건수도 1천91건으로 118건 줄었다.

은행권도 신규·증액 보증부대출 중 보증을 못 받는 부분에 대해 전액 연대보증 없이 대출을 실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보증비율이 85%인 보증부대출이라면 은행이 손실 위험이 있는 나머지 15%만큼은 연대보증을 지게 하는 방식으로 위험을 회피했다. 대출 금리도 큰 차이 없었으며 보증부대출 후 전용계좌를 통해 기업의 자금사용내역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사후관리하는 시스템도 고도화된 상태다.

정부는 신규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에 이어 올해 하반기부터 기존 연대보증 대출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기보는 매년 기존 연대보증 기업 중 20%씩 책임경영실사를 하고 통과하면 연대보증을 폐지하기로 했다. 만약 통과하지 못 해도 보증부 대출을 유지하고 나중에 다시 심사해 기회를 주기로 했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

국민 3명당 1명 '땅주인'... 수도권 거주자가 35% 소유

상위 50만명 토지 54% 소유

국민 3명 중 1명이 개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거주자가 전체 면적의 35%를 갖고 있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 인구인 5178만명 중 1690만명(32.6%)가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2년 말과 비교하면 158만명이 증가한 수준이다.

상위 50만명의 토지 소유비율은 53.9%로 5년 전보다 1.3%포인트 줄었다.

연령대별로 60대의 보유비율이 26.6%

로 가장 높았고 50대 25.4%, 70대 19.1% 순으로 나타났다. 20세 미만인 소유한 토지 비중은 0.3%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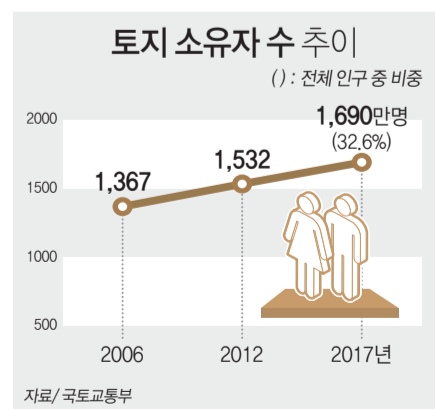
거주지별로 전체 개인 소유 토지의 35.2%를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었다. 이어 경상권(28.1%)·전라권(16.4%)·충청권(13%)·강원권(5.7%)·제주권(1.5%) 순이었다.

토지 소재지 기준 관내 거주비율은 평균 56.7%였다. 이 중에서도 서울의 관내 거주비율이 81.6%에 달했다. 반면 세종은 관내 거주비율이 20%로 외지인의 토지 소유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번에 신규 추가된 토지거래 회전율을 살펴보면 면적 기준으로 세종시 3.7%, 전남 3.0%, 경기도 2.9% 순으로 거래 이뤄졌다. 서울은 0.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회전율을 보였다.

이번 토지 소유 현황 통계는 2006년과 2012년 이후 세 번째로 작성됐다.

토지 기본 현황을 살펴보면 국토 총면적은 5년 전보다 175.7㎢ 증가한 10만364㎢로 집계됐다. 이 중 민유지가 51.3%, 국공유지 33.1%, 법인 보유 비중이 6.9%를 차지했다. 용도별로 농림지역이 49.0%로 절반에 달했다. 이어 관리지역



(23.6%)·녹지지역(11.4%)·주거지역(2.3%) 등 순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의성 있는 통계제 공을 위해 작성 주기를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